



12월 28일(금) 11:40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*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교육부, 농식품부, 복지부, 해수부, 식약처		
답 당	국무조정실	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과장 최대원, 사무관 서밀가 (044-200-2379, 2382)
		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	부단장 김규형, 사무관 정길수 (044-200-2379, 2459)
	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		과장 권지영, 연구사 곽유미 (044-203-6445, 6443)
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		과장 박홍식, 사무관 김동일 (044-201-2359)
	보건복지부	노인정책과	과장 이상희, 사무관 고금숙 (044-202-3465, 3456)
		요양보험운영과	과장 박민정, 사무관 김은호 (044-202-3510, 3512)
		보육기반과	과장 김우중, 주무관 배선희 (044-202-3580, 3583)
	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	과장 조성대, 사무관 배준오 (044-200-5630, 5633)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	과장 이수두, 사무관 최규호 (043-719-2252, 2275)	

이낙연 국무총리,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

- (어린이·어르신 급식) 위생·영양 지원 강화, 투명한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
- (축·수산물) 사료검사 강화,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.

- * (참석) ▲ 민간위원 7명(정덕화, 오상석, 김연화, 권석형, 정하숙, 송순영, 권석형, 김명철)
▲ 정부위원 9명(농식품부장관, 국조실장, 식약처장, 기재부·교육부·법무부·복지부·해수부·환경부 차관)

○ 오늘 회의에서는 「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」, 「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」, 「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

- 2017년에 마련한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

[안건 1]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

- 교육부, 복지부,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·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- 주요 대책은 △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, △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△위생·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.

< 식약처 >

- 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)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·유치원의 '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' 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* 하고,

* (어린이집·유치원)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으나,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
⇒ 센터등록율 : ('18) 67% → ('22) 100%

-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도 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*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* 50인 이상만 영양사 의무고용,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,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 ⇒ (가칭) 「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」 제정

- (고령친화식품 등 기준·규격 마련) 고령친화 식품*이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·규격 등을 마련하고,

* 씹는 기능, 소화기능 등 향상

-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·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·영양지원 시범사업*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* ('19.7) 시범사업 280개 → ('20) 평가 후 본사업 추진

< 교육부 >

- (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)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'유치원급식소위원회' 설치를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(현행 국공립, '19.6),
 - 시·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('19) 하는 한편,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(에듀파인)을 단계적으로 도입할('20.3월까지) 예정입니다.

< 복지부 >

- (열린 어린이집 확대)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'열린 어린이집'을 확대*('19~) 하고,
 - * ('18) 1,854 → ('19) 3,401개소
 -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를 반영('20) 해 나가는 한편, 요양·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('19~) 했습니다.

[안건 2]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

-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·위생문제*를 해결,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「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 - * 물, 종자, 사료 등 → 유해물질 유입, 질병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·남용
-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△양식 수(水) 안전관리, △건강한 종자 공급, △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.
- (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)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·여과·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'수처리 시스템' 설치 지원*을 확대하고,
 - * 정부 보조 : ('19) 82억원, 15개소 → ('22 까지) 350억원, 60개소

-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*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

* 해수면 어종('19~'21, 총사업비 400억, 육상), 내수면 어종('19~'20, 총사업비 100억)

○ (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)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·보급*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를 건립하고('19~22, 2개),

* 골든씨드프로젝트 : 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(수산과학원)에서 연구·개발 등 사업 수행('13~'21. 745억원)

-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('20) 예정입니다.

○ (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)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을 공개*('20~) 하고,

*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,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

- ① 품질개선, ② 시험연구, ③ 생사료 제한,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, '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[안건 3]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

□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는 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「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이를 위해 △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, △수입사료 검사, △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, △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.

- (관리대상 농약 추가)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,
 - 축산물 관리 대상 농약(99개 성분)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(141개 성분)이 아닌 경우,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.(‘19~)
 - *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(飛散)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

- (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)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·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(‘19~)하고,
 - 무작위 표본검사는 대상물량을 확대*하고 ‘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.
 - * (현행) 수입사료의 2.8% (1,445건) → (개편) 5% (2,578건)

- (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) 사료검사 실적보고, 대장관리 등을 ‘사료관리정보시스템’으로 일원화 시켜,
 -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,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(‘19 하반기)

- 또한, 국내 생산·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 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(~‘20), 안전성 검사 성분*과 벧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**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
 - * (‘18) 3항목 → (‘19) 4항목
 - ** (벧짚 및 청보리 등 사료작물) : (‘18) 561점 → (‘19) 811

[안건 4] 2018년도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 이행점검 결과

-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,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(17.12.27)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.

< 점검 결과 >

- 54개 세부과제 중 △계란 전수검사 실시, △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, △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37개 과제를 완료했고, △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, △가금류(닭·오리 등)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 등 법령 제·개정을 수반한 17개 과제는 추진 중입니다.

< 주요 성과 >

- 계란의 선별·세척 유통,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,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('17년 : 78건 → '18년 : 9건) 했고,
 -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, 수산물 국가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·축·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.
 - 아울러,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,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진드기 방제약품을 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,
 - HACCP 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.
- 다만,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·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붙임) 1. 식품안전위 개요 2. 식품안전위 민간위원 명단 3. 식품안전위 심의의결 주요 개선내용 4. 2018년도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 주요성과

붙임 1

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

□ 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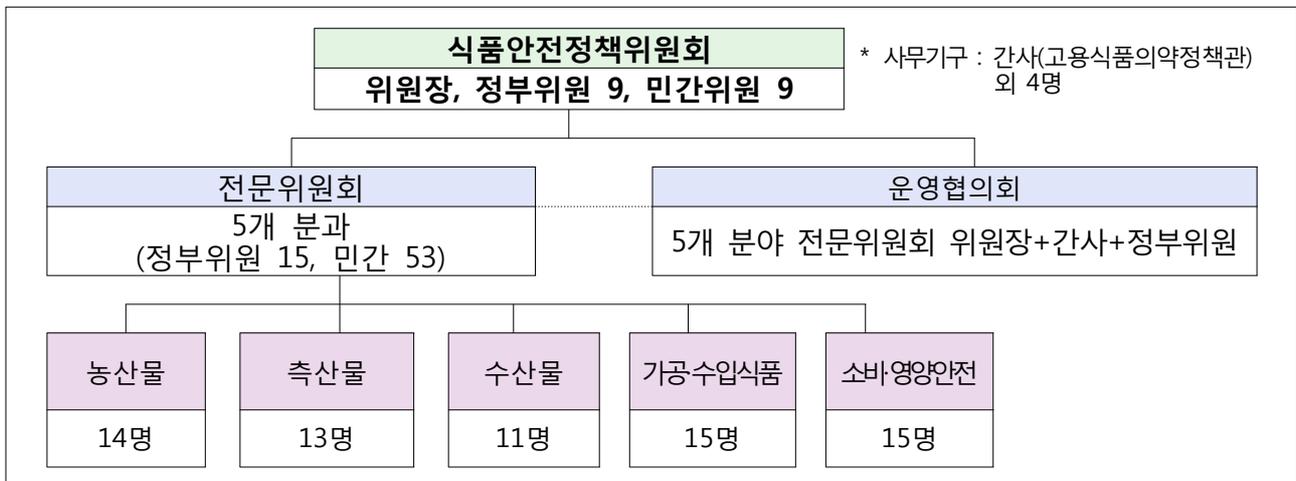
-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(설치: '08.12.14)

□ 구성

-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(당연직*) 9명, 민간위원(위촉직**) 9명

* 기재부·교육부·법무부·농식품부·복지부·환경부·해수부 장관, 식약처장 및 국무조정실장

**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



□ 주요기능

-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심의·조정
- 식품등의 안전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- 식품안전 법령 및 기준·규격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-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-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·조정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·조정

사진	성명	학력 및 주요 경력
	정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상대 농화학과 학사 · 충남대 농학박사 · 대한민국 GAP 연합회 회장 · 現 경상대 식품공학과 석좌교수
	조영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산수산대학 식품공학과 수산학사 · 일본 북해도대학 수산학 박사 · (사)한국생선회협회 회장 · 現 부경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
	오상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식품공학과 학사 · 미국 캘리포니아대 박사 ·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원장 · 現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
	김연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덕여대 가정학과 학사 · 중앙대 소비경제학 박사 ·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공동위원장 · 現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
	권석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앙대 약학과 학사 · 중앙대 약학과 박사 ·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 · 現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
	정하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덕성여대 식품공학과 학사 · 덕성여대 이학 박사 · 기능성식품 및 생물농약 기술자문위원 · 現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
	송순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사 · 이화여대 사회학 박사 · 식약처 자체구제심사위원회 위원 · 現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
	김명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대 식품공학과 학사 · 미국 퍼듀대 이학박사 ·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과학연구원장 · 現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산학겸임교수
	이종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· 경희대 홍보학 박사 · 월드비전 홍보운영위원회 위원장 · 現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

붙임 3

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주요 개선내용

□ (안전 1)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

구분	추진 과제	현재	개선
급식관리 지원체계	▶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	컨설팅 수준	실행력 제고 (건강위해 보고 의무, '20~)
	▶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대	67%	100% ('22)
	▶ 어르신 급식관리 지원체계 구축	-	근거마련 (법률 제정, '19)
	▶ 부모 참여 '유치원급식소위원회' 설치	국공립 유치원	모든 유치원
	▶ 부모 참여 '열린어린이집' 확대,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 강화	1,854개소 점검주기 없음	3,401개소 ('19) 2년 주기 (모든 어린이집)
	▶ 관계 기관 협업 강화	-	협업체 구성·운영 ('19)
회계관리 투명성	▶ 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적용 확대	국공립 유치원	모든 유치원 ('20.3)
	▶ 어린이집 회계보고(매월) 관리 강화	-	주기적 알림서비스 ('19.10~)
	▶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항목 확대	비리 건수, 유형 중심	기관명, 시정여부까지 ('19~)
	▶ 어린이집 급식비 회계모니터링 현장점검(반기별) 강화	이슈발생시	필수 점검 ('19~)
	▶ 노인 복지시설 급식비 지출관리 강화	회계시스템 점검 중심	현장점검·조사 강화 ('19~)
	▶ 유치원 적정 급식비 기준 마련	-	기준 마련 ('19)
	▶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한 어린이집 적정 급식비 반영	'14년 계측 반영	'18년 계측 반영 ('19)
위생·영양 프로그램	▶ 고령친화 표방 식품 기준·규격 및 특수용도식품 관리제도(안) 마련	-	기준·규격 등 마련 ('19.6)
	▶ 연령별 식단 작성·조리·배식기준 마련	-	기준 마련 ('19.1)
	▶ 학부모안심유치원 시행 확대	7개 시도	전국 확대 ('20)
	▶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	3개 시도	전국 공유·확산 ('19)
	▶ 소규모 어르신 시설 급식관리 지원	-	지침 마련 및 시범 사업(280개소) 추진 ('19.7)
	▶ 복지관 등 대상 찾아가는 어르신 체험교실 운영 확대	20개소	30개소 ('19)

□ (안전 2)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

구분	추진 과제	현재	개선
양식수 관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	▶ 수처리시설 보급 지원 확대	49개소 지원	60개소 지원 (‘19~’22)
	▶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	-	3개 클러스터 조성 (‘19~’22)
건강한 수산 종자 공급 시스템 구축	▶ 질병 내성 등이 있는 수산종자 품종 개량 지속	3품목, 11종	7품종, 20종 (’22)
	▶ 해역별 맞춤형 종자연구센터 신·증축	6개소	8개소 (’22)
	▶ 민관 수산종자업체 육성지원센터 지정	-	지정·운영 (’20)
안전한 배합사료 확대	▶ 맞춤형 현장 사료 개발	-	2개소 (’19~’20)
	▶ 사료 안전 관리 강화 (안전성 항목 구체화, 배출수 수질 기준 마련)	-	제도 개정 (’19)
	▶ 사료 공급 업체별 품질등급 공개	-	품질등급 공개 (’20)

□ (안전 3)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

구분	추진 과제	현재	개선
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강화	▶ 축산물 관리 성분(99성분) 중 사료 관리 성분에 없는 성분 연계 보완	사료 관리대상 농약 141성분	141+α 확대 (’19 상반기)
	▶ 민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	-	협의체 운영 (’18.10~)
수입사료 검사의 공정성 강화	▶ 국가검사체계 도입	민간	서류·정밀검사 (1차 민간 → 2차 일부선별점검 농관원, ’19) 무작위표본검사 (농관원으로 이관, ’21)
	▶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 물량 확대	2.8% 수준	5% 수준 (’19~)
국내 생산·유통 사료안전 관리 강화	▶ 사료 종류별 위해요소를 반영한 검사성분 선정 시스템 개발	-	프로그램 개발 (’20)
	▶ 조사료 검사 물량 확대	벗짚 100점 사료작물 461점	벗짚 150점 사료작물 661점
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	▶ 실적·대장보고 등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	서면 관리	정보시스템화 (’19 하반기)

붙임 4

2018년도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 주요성과

